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의 문제점과 사업 중단 필요성

** ‘2012년도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2011. 11. 11)의 한 쪽지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사업목적과 소요 제기의 타당성 결여
2. 군비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MTCR 취지에 어긋나
3. 특정 기종을 밀어주는 비정상적인 사업 방식으로 예산의 낭비 우려
4. 미국의 압력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국가주권 훼손 가능성
5. 3배 된 가격과 운영비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심각
6. 군사주권 훼손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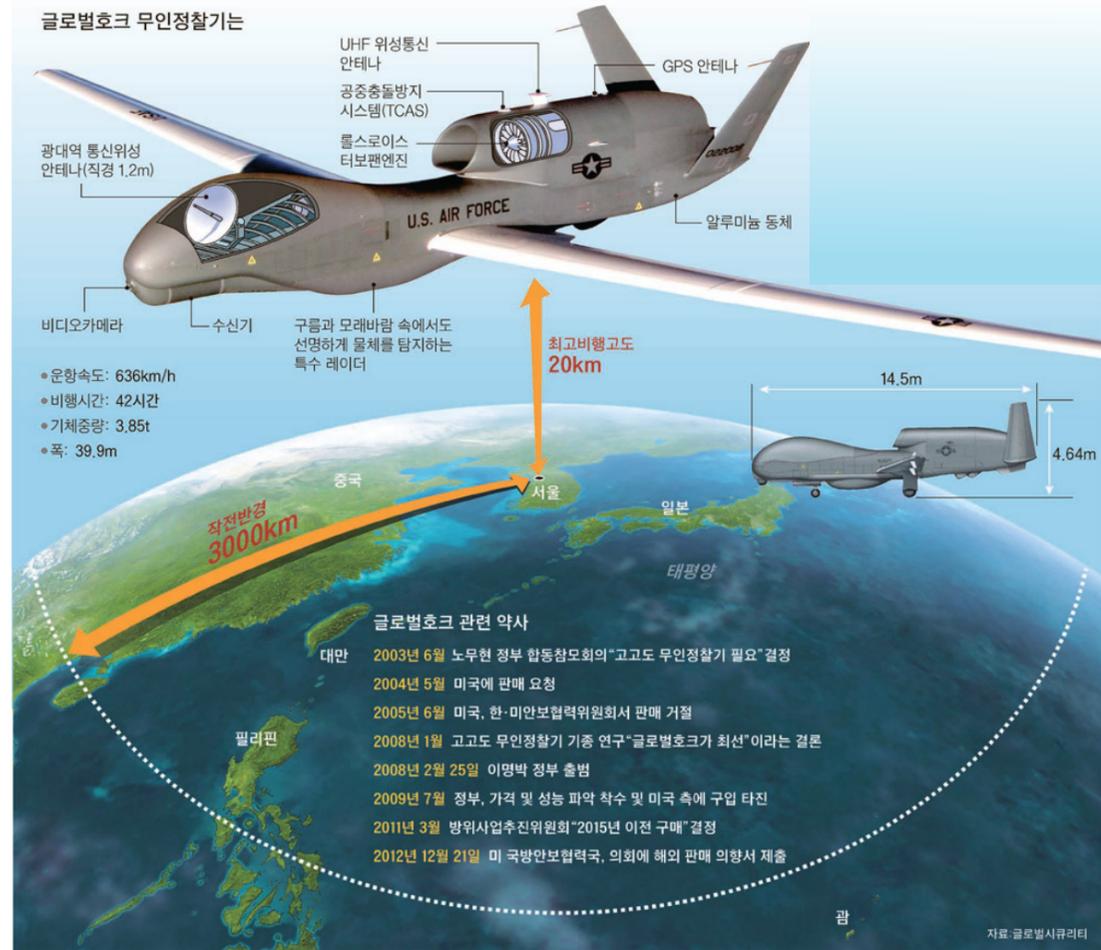
1. 국방부가 주장하는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사업 목적

- ①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전장감시능력 기반 확보
- ② 북한 중심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전략표적의 획득

2.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①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전장감시능력 기반 확보라는 사업목표는 주변국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한편 우리의 전력증강을 왜곡할 수 있다.

-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전장감시능력 기반 확보라는 사업목표는 일본과 중국 등을 전략적인 감시·정찰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도입하는 장비는 특히 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픽 : 중앙일보(2012.12.26)

- 작전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북한 면적보다 넓은 14만km²에 이르는 지역을 36시간에 걸쳐 단속 없이 탐지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는 대북 감시 정찰용이라기보다는 대중, 대일 및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감시정찰 무기체계다. 따라서 이런 광역 정찰기능을 보유한 무기체계 도입은 불가피하게 이들 국가와의 갈등을 야기한다.
- 중국과 일본은 정찰위성을 제외하고는 아직 글로벌 호크와 같은 첨단 전략 감시·정찰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전술 감시·정찰자산에서도 남한은 51대로 21대(전자전기 11대 포함)를 보유한 일본보다 우위에 있으며, 133대(해군 13대)를 보유한 중국에 비해서도 중국의 넓은 영토를 고려한다면 비교 우위에 있다. (『MilitaryBalance 2010』)
- 한편 남한은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현존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일본이 남한을 무력 침탈할 잠재적 가능성도 없으며, 설령 그런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남한은 이들 국가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방위충분 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 속에서 굳이 글로벌 호크와 같은 고성능의 광역 감시·정찰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 그런데도 소위 미래 불특정 잠재 위협이라는 모호하고 실체 없는 위협(?)에 대비 해 무기를 도입하게 되면 미래 상황에 대한 막연한 예측에 따라 무기를 도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을 가늠할 수 없으며, 잘못된 무기도입이 되기 쉽다. 이로 인해 국가재원이 낭비되는 한편 보다 긴요한 현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도입에 재정적 난관을 조성함으로써 전력증강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② 한국군은 대북 전구작전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전략·전술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감시·정찰전력을 갖추고 있다.

- 국방부는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전술 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 T/F,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2006. 8. 17, 13쪽)고 밝힌 바 있다.
- 한국군은 현재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략 영상정보에 대해서만 미군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남한은 지금도 아리랑 2호(해상도 1m)를 통해서 대북 전략 영상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리랑 3호(해상도 70cm), 5호(전천후, 해상도 1m) 등의 정찰위성도 발사할 예정이어서 고해상의 전략영상을 전천후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의 전략표적(800여 개로 추정, 동아일보, 2009. 11. 2)을 공격하기 위한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북한이전략표적 대상을 새로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정보 획득은 현재 자산으로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 한편 남한의 정보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북한은 전략 영상·신호정보를 획득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전술 정보의 획득에 있어서도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북한은 정찰기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남한은 모두 51대의 신호·영상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

다.([Military Balance 2010]) 여기에 더해 정찰 파드를 장착한 10여 대의 F-16, 서처 2 무인정찰기, 군단이 운영하는 무인정찰기(‘송골매’) 등의 정보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 이렇듯 미군 U2기가 철수하거나 퇴역한다고 해도 글로벌 호크의 도입은 불요불급한 과잉 전력으로 된다.

3. 글로벌 호크 도입사업 중단 필요성

① 글로벌 호크는 단순한 감시·정찰무기가 아니라 공격무기의 하나로, 군이 제시한 사업목표에 위배된다.

- 글로벌 호크는 미사일이나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무기로, 감시·정찰자산의 도입이라는 사업목적에 위배된다. 글로벌 호크는 RQ-4A이 2천 파운드, RQ-4B는 3천 파운드의 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사저널, 2011. 9. 28). F-5E 타이거 II와 같은 구형 전투기 무장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무장력이다.

② 또한 글로벌 호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범주 1에 해당하는 수출 금지 품목으로, 이를 수출하는 것은 군비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취지에 반한다.

- 미국은 2006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총회에서 무인비행체 통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글로벌 호크가 감시·정찰용라는 이유로 2010년도에 이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중앙일보, 2011. 9. 14),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서 한국을 탈퇴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사저널, 2011. 9.28). 이는 무기수출에 관한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 잣대 정책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시킬 뿐이다.

③ 사업 추진 방식이 특정 기종을 밀어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방위사업청은 고고도무인정찰기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2011. 3. 23)하면서 기종을 글로벌 호크로 특정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방추위원은 “그 동안 방추위 회의에 계속 참여해 각종 무기도입과 관련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승인해 왔지만 이번과 같이 특정 제품과 구입 방식을 명시한 적은 없었다.”고(주간경향, 2011. 4. 19)고 밝힘으로써 이 사업이 통상적인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이탈하였음을 폭로하였다. 이와 같이 HUAV 사업은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기종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④ 미국의 압력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국가주권을 훼손시키고 있는 고고도무인정찰기 사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 현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는 국방예산 삭감을 위해 고고도무인정찰기 도입 사업을 중단시켰다. 2008년 3월 12일 “청와대는 국방부의 장난감을 사주려고 수표를 써주지는 않을 것”(위키리크스, 2008. 3. 25, 주간동아, 2011. 9. 26)이라며 글로벌 호크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 대사관을 필두로 이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 왔다.
- 버시바우 미 대사 : “글로벌 호크의 도입이 미국의 국익과 동맹 유지에 필수적”(위키리크스, 2007. 12. 3)이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였다.
- 주한미 대사관 : 유명환 외통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추진하던 국방예산 삭감 문제가 글로벌 호크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위키리크스, 2008. 3. 25)
- 세드니 미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 : 2008년 4월 8일 서울에서 열린 SPI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글로벌 호크 구매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압박을 가했다.(위키리크스, 2008. 4. 28)
-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기지 이전, 글로벌 호크 도입 등에서 항상 강하게 압박해 왔고, 한국은 이에 부응하려고 애써왔다.”고 밝혔다.(위키리크스, 2008. 5. 30)
- 미국은 글로벌 호크 도입을 반대하는 인사로 김병국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목하는 등의 압박을 가하였다.(위키리크스, 2008. 5. 30)
- 세드니 미 국방부 부차관보 : 2009년 3월 2일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

(SPI) 회의에서 “5월 SPI 회의 전까지 LOR를 제출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였다.(위키리크스, 2009. 3. 5)

- 주한미 대사관 : 2009년 9월 24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10월 15일 게이트 국방장관 방한을 앞두고 글로벌 호크 도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위키리크스)
- 이와 같이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리를 앞세워 과거 어느 미국산 무기 구매 압력을 능가하는 고강도의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국방부의 HUAV의 도입을 중단시켰던 현 정부를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 굴복시킨 것으로, 국가주권이 훼손된 심각한 사태다.

⑤ 천정부지로 치솟는 도입 가격과 운영비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 최근 미국이 제시한 글로벌 호크 판매가격은 9422억원(뉴시스, 2011. 9. 25)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구매 총액은 1조원 대(한겨레, 2011. 4. 2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03년 편성된 최초 사업비 1,870억(중앙선데이, 2011. 6. 25)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효용에 비해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이다.
- 이는 기종 간 경쟁을 유도하는 구매 전략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기종을 독점 구매하는 방식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채택한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 이와 같이 최초 총사업비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직전 총사업비에 비해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국방사업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거해 사업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 국방부가 2011년 10월부터 3개월 간 평가한 결과 글로벌 호크 블록 30형은 발전기 등 핵심부품의 고장이 16곳이나 발견되었다고 한다.(아시아경제, 2011.6.15) 이는 글로벌 호크의 운영비도 급등할 것임 말해 준다.

⑥ 글로벌 호크는 도입을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등 군사주권이 훼손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미국은 글로벌 호크와 인공위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감시·정찰 네트워크를 운용하기 위해 지상 수신기지 시설이 갖춰진 괌의 미군기지에 운용기지를 배치해야 한다는 뜻을 한국에 알려 왔다.('디펜스 21', 한겨레신문, 2011. 4. 29) 이는 도입된 글로벌 호크를 통해서 획득한 모든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미군의 자산으로 운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각한 군사주권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 미 국방부가 2011년 10월부터 3개월 간 평가한 결과 글로벌 호크 블록 30형은 작전임무의 40%밖에 수행하지 못했고, 발전기 등 핵심부품의 고장이 16곳이나 발견되었다(아시아경제, 2011. 6. 15). 이는 도입된 글로벌 호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임무도 수행하기 어려울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⑦ 방위사업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사업 추진 방법 등을 재검토할 것”(중앙 선데이, 2011. 6. 25)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는 글로벌 호크가 당장, 반드시 도입해야 할 필수 기반전력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 그렇다고 탐색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나 글로벌 업저버 등의 다른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되어서도 안 된다. 이들 기종의 도입도 마찬가지로 과잉정보자산으로 되기 때문이다.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탐지거리가 200Km로 기존 정찰자산의 대안으로 되기 어려우며, 글로벌 업저버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할지 모르나 한반도와 같은 작전전구용이 아니라 글로벌 호크와 마찬가지로 세계 전구용으로 우리 군이 운용하기에는 전혀 불필요한 과잉전력이기 때문이다.

⑧ 이렇듯 글로벌 호크 사업은 사업목적과 소요 제기의 타당성 결여, 도입 가격과 운영비의 급등, 도입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가주권의 훼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군사주권의 훼손 등 모든 과정이 잘못된 사업으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